



안녕하십니까?

충남·충북·대전·세종 사회복지사협회(이하 충청권사회복지사협회)는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입후보자들에게 선거공약을 공동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회신된 질의서 답변내용을 충청권사회복지사협회 선거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오니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사회복지사협회는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자들의 공약 의견을 선거법이 접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 2.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사회복지사협회장 드림

...

발신협회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Tel) 043-232-2213. Fax) 043-232-4413.

E-mail) cbasw@hanmail.net



(충남·충북·대전·세종) 사회복지사업회 20대 중앙회장 선거 공약제안 답변내용

1. 세종시 또는 인근으로 이전하여 업무효율성을 통해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② 조승철 후보

② 현행대로 서울에 있어야 한다.

③ 기타의견

기호① 오승환 후보

유지하되 세종시에 '분소'를 설치하여 정무기능을 강화하되 분소의 효용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협회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기호③ 김진학 후보

보건복지부가 세종시에 있으므로 사무실 이전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협회를 이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회장 혼자 임의로 협회사무실 이전을 결정한다는 것은 또다른 회장의 독선, 독단, 불통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회원들의 의견 수렴, 이사회 의견,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자함

기호④ 이호경 후보

현실적인 문제 검토 후 단계별 추진 필요함. 정무적 기능강화 등의

2. 지방협회를 별도의 독립 법인화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협력을 증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독립 법인화 추진

② 독립 법인화 논의

기호① 오승환 후보

지방협회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별도 법인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함. 다만, 지방협회 독립법인화에 따른 전국적 단일조직인 한국사회복지사업회의 위상, 회원의 이중 소속(지방협회 법인 소속+중앙협회 법인 소속)의 문제, 별도 법인간의 예산 지원의 한계, 현 중앙 및 지방협회의 재산권 분할 등 세부사항을 한국사회복지사업회와 지방사회복지사업회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는 조건으로 추진 동의

③ 현행 유지 및 보완

기호③ 김진학 후보

④ 기타의견

② 조승철 후보

지방협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했을 때 현 공동모금회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발령제도를 도입하고 17개 시도협회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자격유지제도 법제화를 통한 예산확보 및 신규회원회비 수입의 배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④ 이호경 후보

공약 6, 중앙협회와 지방협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 즉각 논의 착수

3. 순환근무제처럼 지방협회 사무처장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도입한다.

기호② 조승철 후보

기호③ 김진학 후보

기호④ 이호경 후보

② 도입하지 않는다.

③ 기타의견

기호① 오승환 후보

“조건부 동의”

※ 중앙협회의 지방협회에 대한 합리적 규모(지방협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의 예산지원과 인사권(채용, 임면, 발령 등)이 중앙협회에 귀속되는 체계가 선결된다면 순환근무제 가능. 또한 공동모금회의 경우, 지역공동모금회 회장은 직선에 의한 회장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인사권 행사, 예산집행의 자율권에 한계가 있으나 우리협회와 같이 직선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에서는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음.

4. 중앙협회 조직 및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분석과 성과평가 실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년 실시한다.

기호① 오승환 후보

기호② 조승철 후보

기호③ 김진학 후보

기호④ 이호경 후보

② 3년 마다 실시한다.

③ 기타의견

5. 위상을 높이고자 한국사회복지사 회원 자격기준을 연회비 납부자(정회원)로 강화하는 정관 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정 찬성

기호② 조승철 후보

기호③ 김진학 후보

기호④ 이호경 후보

찬성(협회가 실제 위상을 높이는 방법은 회원 수 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물리치료사협회 등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협회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구인구직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없음)

② 개정 반대

③ 기타의견

기호① 오승환 후보

현행을 유지하되 회장선거시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 전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집행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예산 확대, 회원의 참여를 유도 할 필요가 있음. 연회비 납부자 기준, 회원자격을 부여할 경우 회원이 매년마다 변동되며 그 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전체 회원의 수가 급감할 것이고 일부 불순한 의도의 제2의 협회 조직 결성 등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 됨.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과 지방협회 규정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항상 논란의 여지를 갖는 상황에서 중앙협회 정관과 지방협회 규정을 연동하고 정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정비 찬성

기호① 오승환 후보

기호② 조승철 후보

기호③ 김진학 후보

기호④ 이호경 후보

② 정비 반대

③ 기타의견

7. 개최 필요성과 운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호① 오승환 후보

1. 현,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가 축구중심, 지방협회간의 과도한 경쟁, 다른 사업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 등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 현실임.
2. 따라서, 체육대회는 현 시행중인 전국사회복지사 야구대회와 같이 사회복지사들간의 교류, 협력의 장으로서 사회복지사축구동아리가 모여 화합의 경기를 펼치는 형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3. 대안으로, 현행 체육대회와 같은 단순 친목 행사는 지양하고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화합과 연대의 장으로서 현 사회복지사의 날+체육대회를 통합하여 “(가)한국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로 전환하는 방안 신중 고려 필요 함. “한국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는 전문성 향상, 교류협력의 장, 대국민 홍보, 대 정부 정책제안 등을 목적으로 학술대회, 표창, 기념식, 이슈파이팅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② 조승철 후보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는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타 지역의 사회복지사와 교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구대회를 비롯 몇 가지 종목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매년 개최되면서 실제적인 사회복지사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참가하는 타 지역에서 오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이벤트(ex 세대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첨가)가 함께 병합되고 사회복지사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현재의 육상과 축구에 편중된 종목을 좀 더 다양하게 선정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먼저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매년 개최되는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를 2년 주기로 주기를 늘리고 체육대회가 없는 해는 축구대회로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방안입니다. 이는 지방협회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2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체육대회의 참여의지를 북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③ 김진학 후보

1. 사회복지사 참여를 높일수 있는 경기내용 보완
(체육대회 경기의 다양성, 축제형태의 진행방식, 여성사회복지사에 대한 배려 등)
2. 우승 지역이 아닌 지역별 순서로 정하여 개최지 결정

기호④ 이호경 후보

실천현장의 사례발표 등의 전문가로서 위상제고를 위한 학술대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체육대회는 일부 관심있는 자의 행사로 끝날 수 있음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해외연수 등을 학술포럼으로 이어서 진행된다면, 해외연수 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접목할 수 있음. 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즉, 해외연수프로그램을 모집, 배치, 결과발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를 전문가로서 위상제고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해 금번 대선 공약으로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시고자 합니까?

기호① 오승환 후보

1. 사회복지사 임금, 공무원 임금체계 적용(예산 추계: 연간 3,522억 추가 소요)
2. 사회복지시설평가 완전 폐지, ‘(가)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공단’을 설립하여 운영 컨설팅 중심의 평가 체계로 대체

※ 위 2가지 사안은 오승환 후보 선거본부에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에게 그

전달한 바 있음.

② 조승철 후보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출마 후보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미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협회가 의지를 갖고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국가 복지사업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당 44시간이 넘는 근로시간과 차상위계층 수준의 임금으로 대상자에 대한 헌신과 일에 대한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8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복지사 법정 의무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와 상해보험비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 97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2천20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천500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결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직능 구분 없이 지원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여를 공무원 통상임금 100% 추진, 사회복지 시설에 구별됨 없이 사회복지사 단일임금 체계 추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무화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보수교육비 개인부담 면제, 안식월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 등을 위한 공약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단순히 협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입법 시, 여론에 의해 정치권이 움직이거나,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견에 의해 입법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동향과 보건복지부의 입법의지와 입법움직임을 관찰하고, 개입하여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정치권 및 행정부의 움직임과 의지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협회에 필요하며, 법제화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의견과 방향이 법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호③ 김진학 후보

1. 한국사회복지시설관리공단 설치
2. 한국 사회복지사 연수원 설립
3. 사회복지사 정부 훈포장 확대

기호④ 이호경 후보

1. 사회복지사 개인사무소 설립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 : 공공영역 일자리개발이라는 대선공약을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이 있음.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발견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사무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즉, 시민들에게는 사회복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게 하고,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실천활동을 할 수 있음)
2. 개인의 사회복지기관 위탁운영 : 어린이집 등은 개인이 위탁운영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므로 사회복지기관 위탁운영이 가능할 수 있음. 국가(중앙, 지방)의 책무를 사회복지영역에서 실천하므로, 책임성과 책무성이 확보된다는 조건으로 개인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사회복지기관을 위탁운영하도록 함
3. 기타 : 현재 각 정당은 직능단체를 담당하는 의원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이 적다는 이유로 담당 의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등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부족하여 왔음. 금번 회장선거 후 각 정당에 협회 담당 국회의원 선정을 요구할 것임

9. 사회복지사들만이 아닌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오승환 후보

국내거주 사회복지사에게 보수교육 의무 이수 필수 조건으로 법률 개정 필요. 다만, 현재 비대상 사회복지사 중,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사유를 명시하여 유예를 신청할 경우 3년 이내, 2회에 한하여 조건부 유예 필요.

기호② 조승철 후보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85만명에 이르나 이중 절반 정도만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업 비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복귀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에 아직 근무하지 않은 분들이 다시 현장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격유지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취업 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전문성향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킨 결과는 사회복지사업의 자체의 질적 향상은 물론,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끄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덧붙이면 이러한 점에서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몫이므로 당연히 그 재원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출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지원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서의 보수교육'이 되어야 하며, 국비, 지방비 확보를 통해 보수교육비 개인부담에 대한 면제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기호③ 김진학 후보

1. 직장을 다니는 사회복지사 교육을 보수교육이 아닌 직무교육으로 전환
(매년 실시 최소3일, 점차확대필요)
 2.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함
(자격증만 소지자의 경우 1~2년 년8시간 보수교육이수)
- ※ 보수교육 미이수시 보수교육 미이행 기간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적용

기호④ 이호경 후보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단,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와 구직 중인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내용과 방법은 달라야 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재직중인자의 보수교육은 이념과 철학, 실천기술, 현재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을 실천영역별로 실시함

구직 중인자의 교육은 희망하는 실천현장의 이해에 대한 교육과 달라진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도록 해야 함. 또한, 경력단절 사회복지사와 소규모시설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수교육과 접목하고자 함.

예를 들어, 소규모시설종사자가 보수교육에 참석할 시 경력단절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현장을 이해하도록 하여 서로 상생하도록 할 것임

10. 장기근속 퇴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훈·포상 제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오승환 후보

. 근정훈장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개정 필요. 다만, 개정안이 지난 수년간 수차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협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호② 조승철 후보

국가가 해야 하는 복지사업을 대신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사회복지계에 투신하여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은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하여 국가가 공로를 인정 근정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상훈법은 공무원,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회복지사처우법 대상자로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근정훈장 수여가 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경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공적인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역시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호③ 김진학 후보

상훈법을 개정하여 훈장의 종류에 사회복지 분야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시켜야 한다.(국민훈장에 포함)
대통령 훈장: 33년이상
대통령 포장: 30년이상 33년미만
대통령 표창: 재직기간 28년이상 30년미만
국무총리 표창: 재직기간 25년이상 28년미만
장관 표창: 재직기간15년이상 25년 미만

기호④ 이호경 후보

개정되어야 함.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훈·포상제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도 마련되어, 전문가의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마련을 요구할 것임